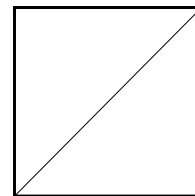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2. 1. (제 2 차)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2. 1.

1. 의결주문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 ‘투자광고 절차 위반’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49조에 따라 메리츠증권(주)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불임)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및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의2호, 제14호,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2호, 제7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및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 가목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제1항 제3호,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2호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제19조(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관계 법규는 안건(붙임) 참고

다. 관계부서 협의

- 제36차(2022.11.30.)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필
- 제1차(2023.1.11.)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
- 제2차(2023.1.27.) 안건검토소위원회 심의필

<별지>

메리츠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메리츠증권(주) : 과태료 2,535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전문투자자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 투자광고 절차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108조 제9호 및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의2호, 제14호, 제99조 제4항 제2호, 제7호, 제109조 제3항 제10호 및 제390조, [별표2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가목,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제4-77조 제6호, 제4-93조 제22호,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2. 조치사유

가.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 금융투자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동 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경우, 동 제공사실과 최초 제공 시점을 조사분석자료와 함께 공표하여야 함에도
- 메리츠증권(주) @ @ @ @ @는 20xx.x.xx~20xx.x.x. 기간 중 ㉠건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면서 동 조사분석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사전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메리츠증권(주)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사전제공 내역

연번	조사분석자료 (공표일자)	사전 제공 수단(일자)	조사분석자료중 사전 제공된 내용	자료 수신자 소속
(1)	●●●●●	♡♡	♥♥	▽▽▽
			♣♣♣	□□□
(2)	♪♪♪	♭♭♭	▽▽▽	▽▽▽
(3)	▣▣▣▣	ℳℳ	◇◇◇◇	◀◀◀
(4)	☞☞☞	▶▶▶	■ ■ ■	◆◆◆◆, ◇◇◇◇
(5)	△△△	●●	◆◆◆	↔↔↔↔
(6)	●●			
(7)	▲▲			
(8)	□□□□		○○○	▼▼▼

나.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지정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 메리츠증권(주)는 '○○○○○ ○○○ 매뉴얼'상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라는 사실을 누락하여,
 - 영업점 직원들이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총 ㉔㉔㉔건의 전문투자자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다.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메리츠증권(주) 舊 ♠♠♠♠(現 ♠♠♠♠♠팀)은 투자자 x명과 상품위험등급이 2등급(고위험)인 ㉔㉔㉔ ㉔㉔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재산을 국내주식 및 RP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xx.x.xx. 1등급(초고위험) ▲▲▲ ▲▲ 종목(○○○○ ○○○○)을 편입(총 ㉔㉔㉔만원)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라.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형 금융상품 및 신탁상품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메리츠증권(주) ◆◆금융센터 등에서는 20xx.x분기~20xx.x분기 기간 중 투자일임형 금융상품 등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 총 ■■■회(●●●계좌)에 걸쳐 분기별 고객 투자자정보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마.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메리츠증권(주) ■■■■■팀 등은 20xx.x.x.~20xx.x.x. 기간 중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5건의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투자광고 절차 위반내역 >

투자광고 내용	광고매체	건수	수신자 (중복포함)	위반내역
WRAP 상품	홈페이지	2	-	준법감시인 미확인
주식 수수료 이벤트 연장	문자메시지	1*	1,095	
신용공여 이벤트 연장	문자메시지	1**	4,375	
사모 펀드	문자메시지	1	1	
합 계		5	5,471	

* 대상자에게 하루 동안 일괄발송되어 1건으로 산정하였음

** 시스템등록(1회)을 통해 162일 동안 이벤트 만기고객들에게 자동발송되었으며,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1건으로 산정하였음

(붙임)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투자광고)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겠다는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받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만원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나목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지 않는 행위

□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2017.10.19.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後)

2. 과태료 산정방식

-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생략)
-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나. 감경 사유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15